자료 II

금강산 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정부 지원 방향

Ⅰ. 정부 지원 방향

钡 기본 방침

○ 관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그 혜택이 가급적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 관광 사업자의 하나인 한국관광공사가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등 북한측의 상응한 조치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회담 개최도 고려

钡 지원 방향

(1)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 경비 보조

○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분단 현실과 통일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남북협력기금법에 규정된 「남북간 왕래 경비 지원」에 따라 관광 경비 보조 추진

○ 경비 보조 범위는 대상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정해 보조하게 될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될 것임

○ 향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다음, 국회 사전 보고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 · 의결을 거쳐 실시해 나갈 계획임

(2)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2001. 6. 29 승인) 상환 조건 완화

○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활성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음

○ 정부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한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 조만간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를 개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기금 대출 조건 완화 문제를 심의할 예정임

锑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자금 투입은 금강산 현지 시설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추가 투자 여부와 규모는 한국관광공사와 현대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될 것임

(3)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과 관광객에 대한 편의 도모 차원에서 금강산에 외국상품판매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임

○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은 협력사업 변경 승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일반 해외 여행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입 절차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가게 될 것임

钡 향후 추진 절차

○ 정부는 우선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대출 조건 완화와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조치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 관광 경비 보조는 준비 기간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시행할 것임

○ 정부는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등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 구체적 내용을 소상하게 밝힐 것임

II. 정부 지원 배경과 이유

钡 최근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상황

○ 관광객의 감소, 현대아산의 자금난 심화, 북측과의 관광 활성화 협상 지연 등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 현재 월 4천 명 미만의 관광객으로는 관광선 운항, 현지 시설 운영 등 필요 최소 경비에 매월 20 ~ 30억 원 정도가 부족
- 한국관광공사도 관광 활성화가 지연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대출 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광사업 참여가 어려움
-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등은 북측의 내부 사정과 전반적인 남북 관계 상황을 감안할 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지켜나가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이 없이는 관광 지속이 불가능

○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을 잇는 「평화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 관광 지속을 위한 지원 방안과 함께 북측의 상응한 조치 확보 노력 등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임

- 정부가 정치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강산 관광은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
- 정부는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광사업이 수익성에 근거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钡 정부 지원 검토 배경

○ 금강산 관광은 「평화 사업」으로 남북간 화해 협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관광 지속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금강산 관광을 통해 42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북한 땅을 직접 밟고 그곳에서 남북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금강산 지역은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남북 화해 협력의 장(場)으로 정착
- 금강산 관광은 IMF 위기시 외국 투자 유치 분위기 조성 및 연평해전시 우리 사회의 안정 유지에 기여
- 북한의 장전항과 해금강 등 군사 작전 지역 개방으로 남북간 긴장 완화에도 크게 기여
- 올해 우리는 월드컵 경기, 부산 아시안게임, 지자체 및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국제행사와 정치 일정을 앞두고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시점임

銻 언론사 국민 여론 조사 결과, 관광 지속에 대해 응답자의 77.4%(중앙일보, 2002. 1. 1), 74%(한국경제신문, 2001. 10. 10)가 찬성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지속되도록 지원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관광이 중단될 경우, 금강산 관광이 가진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남북 관계 개선과 우리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그 동안 추진해 온 관광특구 지정, 육로개설 등이 무위로 돌아가고, 재개 협상도 관광 대가 보장 문제, 상호 불신감 등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함

○ 한편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온 관광 대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광 활성화시까지 관광객 수에 따른 지불 방식으로 바뀌어, 북측에 대한 무리한 지불 없이 최소한의 지원만으로 관광 지속이 가능한 상황임

- 적절한 지원을 통해 금강산 관광이 남북 관계에 기여하는 측면을 계속 활용해 나가면서, 향후 사업자가 사업 운영 방식 개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북 협상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III. 문답으로 알아보는 세부 내용

1. 관광 경비 보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비 보조 대상은 앞으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결정될 것임

- 대체로 금강산 관광의 의미가 특별한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과 금강산 관광을 희망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

○ 보조 범위는 대상과 형편에 따라 기준을 정해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2. 금강산에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를 허용하는 이유는?

○ 그 동안 금강산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는 현지에서 사올만한 물품이 없다는 것으로서, 일반 해외 관광객과의 형평성을 감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임

- 또한 그 동안 외국상품판매소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던 일반 기업들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임

○ 또한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은 관광객 증가와 함께 관광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는 임대 수입 등으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계기도 될 것임

○ 이번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는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우리 관세법에 따른 면세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 외국상품판매소로 부르게 된 것임

3. 이번 지원 조치로 정경 분리가 후퇴하는 것 아닌가?

○ 정경 분리 원칙은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민간 기업의 경제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법 절차에 따라 민간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님

○ 이번 조치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해 온 측면과 함께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공적 측면을 감안하여

- 관광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임

4. 이번 지원 조치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 이번 조치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 관계에서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정부의 관광 경비 보조는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추가 투자는 관광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

○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는 가운데 향후 후속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임

5.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정부가 직접 추진할 용의는?

○ 일부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공공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정부나 공기업이 사업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자 변경을 위해서는 현대의 투자분과 사업권을 인수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북측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일단 기존 사업체계 하에 관광사업을 지속해 나가면서 시간을 갖고 사업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봄

○ 특히 정부의 관광사업 직접 인수 · 운영은 사업권 인수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이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사업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음

- 금강산 관광사업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된 결과, 연평해전시에도 관광이 지속되는 등 남북 관계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진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음

6. 북측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지원하는 것 아닌가?

○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측이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등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 다만, 북측의 내부 사정과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측이 움직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 조치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면서 북측의 상응한 조치를 촉구해 나간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 보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을 방문하는 것이 분단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우리 자체의 수요도 고려한 것임

7. 정부 지원은「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 이번 정부 지원은 금강산 관광이 ‘ 평화 사업 ’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 지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것임

- 따라서 정부 지원을 단순히 소모적인 측면이 아닌 남북간 평화 공존을 위한 비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번 정부 지원은 사업 주체자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교사 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금강산 관광 필요 경비에 대한 지원이며

- 관광공사에 이미 대출해준 남북협력기금의 조건(이자율 4%,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다소 완화해 주는 차원임

○ 정부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되면서, 남북간에 합의한 육로관광, 관광특구 지정 등이 이루어져 수익이 보장되도록 할 방침임

<자료 : 통일부 >